

# 일본 안보정책의 보수화와 대내외적 요인

배 정 호(통일연구원)

## ◆ 논문 요약 ◆

최근 일본은 전후 금기시해 오던 자위대의 활동과 관련된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안보정책의 보수화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를 지향한 정치변동과 정계개편, 미·일동맹의 재정비 및 강화의 추구 등의 흐름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즉, 탈냉전시대의 도래 이후, 일본정치는 자민당 장기집권의 붕괴와 함께 지각 변동을 겪게 되고, 그와 같은 정치변동의 과정속에서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신보수세력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론’을 주창하기 시작하였는데,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론’은 안보정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의 아래에서 일본 안보정책의 보수화의 대내외적 요인에 관해 분석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를 위한 일

본의 군사력의 질적 증강 및 제도적·법적 정비 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일본의 안보정책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증대를 지향하여 ①대내적으로는 정치공간의 보수화 성향속에서 ②대외적으로는 미·일동맹의 강화를 명분으로 보수화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군사력의 질적 증강 및 제도적·법적 정비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본 안보정책의 보수화에 대해서 안보정책 차원 이상 즉, (1) ‘21세기의 정치대국 일본’을 지향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의 일환, (2)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국가체제 정비와 군사적 활동 법적·제도적 정비, (3) 21세기 파워 분담을 지향한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역할 증대 등의 관점에서 주목하고 고찰하여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 I. 문제제기

최근 일본은 고이즈미 연립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전후 금기시해 오던 자위대의 활동과 관련된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이와 같

은 안보정책의 보수화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를 지향한 정치변동과 정계개편, 미·일동맹의 재정의 및 강화의 추구 등의 흐름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즉, 탈냉전시대의 도래 이후, 일본정치는 자민당 장기집권의 붕괴와 함께 지각 변동을 겪게 되고, 그와 같은 정치변동의 과정속에서 기존 정치지도자의 리더십 부재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론’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는데,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론’은 미·일동맹의 강화와 함께 정치공간의 보수화 성향속에서 안보정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의 아래에서 일본 안보정책의 보수화의 대내외적 요인에 관해 분석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를 위한 일본의 군사력의 질적 증강 및 제도적·법적 정비 등에 관해 분석하는 것이다. 즉, 본 논문은 일본정치의 신보수화 촉진과 안보정책,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 등에 관해 분석하고, 아울러 미·일동맹의 실효성 강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확대된 군사활동을 위한 일본의 군사력의 질적 증강과 제도적·법적 정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 II. 일본 안보정책의 보수화의 대내외적 요인

### 1. 대내적 요인: 국내 정치공간의 보수화

#### 1) 정치변동과 정치공간의 보수화

전후 38년간 집권해 온 자민당이 제도적 피로와 정치개혁 능력의 한계성을 노출하면서 일본 정치는 지각 변동을 겪기 시작하였다. 그와 같은 일본 정치의 일련의 지각변동은 ①직접적으로는 정계의 부패, 정치개혁을 둘러싼 자민당 내부의 갈등 및 여야간의 대립, 자민당 정권의 정치개혁 실패 등에 의한 것이고, ②간접적으로는 일본사회의 변화, ‘정책-정치’공간의 확대와 자민당 정권의 한계성, 동서냉전체제의 붕괴 등에 의한 것이다.

일본의 정치변동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치루어진 1993년의 7·18총선 직후 제1당 자민당이 연립정권의 수립에 실패하고 38년만에 붕괴함에 따라, 일본정치는 일련의 정치변동 속에서 이합집산에 따른 정계개편의 진통을 겪게 되었다.

7·18총선 이후 일본의 정치는 ①‘비자민 연립정권’ 대 ‘야당 자민당’, ②‘무라야마 사회당총리의 연립정권’ 대 ‘통합야당 신진당’, ③‘오자와 신진당당수’ 대 ‘하시모토 자민당 총리의 연립정권’ 등과 같은 대립구도를 형성하면서 각 정파들의 합종연횡에 따른 정계개편을 겪게 되는데, 연립정권시대가 개막되도록 하였다.

정치변동에 따른 연립정권의 시대 즉 ①호소가와 연립정권, ②하타 연립정권, ③무라야마 연립정권, ④하시모토 연립정권을 거치면서 일본정치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나타내었다.

첫째, 공산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모두 연립정권에 참여하여 여당 경험을 가지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일본정당의 여당화는 일본의 정치공간을 거의 보수·우경화로 변모시켰다. 특히 무라야마 연립내각의 출범과 더불어 사회당은 현실노선으로 전환하게 되는데<sup>1)</sup>, 이로써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은 기본이념이나 정책노선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었다<sup>2)</sup>.

둘째, 55년체제에서 제1야당이었던 사회당이 연립정권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침하함에 따라 일본의 정치구도는 ‘보수 대 혁신’의 구도에서 ‘보수 대 보수’의 구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구도 및 정치역학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당은 당명을 ‘사회민주당’으로 변경하였다<sup>3)</sup>.

- 
- 1) 무라야마 사회당 위원장의 총리 취임과 더불어 집권정당이 된 사회당은 현실노선으로 전환하였다. 즉, 사회당은 1994년 7월 28일 중앙위원회에서 ①자위대 합헌 인정, ②히노마루 및 기미가요의 일본 국기 및 국가 인정, ③미·일 안보조약의 견지, ④원자력 발전소의 신설 및 증설 등을 당론으로 결정하였고, 고노 요헤이 외상의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에 동조하였다.
  - 2) 1996년 1월에 치루어진 자민당, 신진당, 사회민주당의 당대회에서 제시된 정계개편 및 주요 정책에 대한 기본방침에는 명확한 정책의 대립이 나타나 있지 않고 대체로 불투명하다. 또 아사히신문사(朝日新聞社)가 1996년 1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케이트 조사에서도 정당간의 뚜렷한 정책의 대립이 나타나지 않았다.
  - 3) 사회당은 1996년 1월 19일 동경에서 개최된 제64차 정기 당대회에서 대의원

셋째, 정계개편 등 일련의 정치적 변화 속에서 '전후교육'을 받은 쇼와(昭和)세대가 일본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정계에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즉 쇼와세대의 신보수세력이 일본정계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 2) 국가개혁을 위한 국정기반 강화와 보수대연합

동서냉전시대의 55년체제가 '통상국가 일본'을 '경제대국 일본'으로 발전시켰다면, 탈냉전시대의 7·18총선을 계기로 형성되는 새로운 체제는 '경제대국 일본'을 '정치대국 일본'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7·18 총선 이후 일본정치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신보수세력은 '21세기 정치대국 일본'을 지향하여 국가개혁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국가개혁의 추진을 위한 권력기반의 강화를 위하여 정계개편의 단행과 더불어 보수대연합을 추구하였다.

### (1) 국가개혁 추구하고 보수대연합

일본정치의 변화, 특히 일본 정치공간의 보수·우경화와 신보수세력의 등장은 1996년 10월 20일의 중의원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0·20총선은 과거의 중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6명 선출)가 아닌 소선거구·비례대표제 병립제(한 선거구에서 1명 선출, 비례대표는 11개 블록 별로 정당득표에 따라 당선) 아래에서 처음으로 치루어진 선거였는데, 그 결과는 자민당 승리(21→239), 신진당 패배(160→156), 민주당 현상유지(52→52), 공산당 약진(15→26), 사민당 몰락(30→15)이었고, 사민당과 신당 사키가케의 각외협력<sup>4)</sup>을 바탕으로 한 3년 3개월만의 자민당정권의 부활이었다.

자민당 단독집권의 부활을 실현시킨 하시모토 총리는 내각출범과 함께 21세기에 대비하는 '개혁과 창조'를 기치로 내걸고, 국민들의 높은 지지<sup>5)</sup>

2/3 이상의 찬성으로 당명을 '사회민주당'으로 바꾸었다.

4) 각외협력(關外協力)은 내각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를 바탕으로 '고비용-저효율'의 국가경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을 추구하였다. 즉 하시모토 총리는 1997년 1월 20일의 국회연설을 통하여 행정개혁을 비롯한 재정구조개혁, 경제구조개혁, 금융시스템개혁, 사회보장구조개혁, 교육개혁 등 6대 국가개혁을 발표하였고, 행정개혁을 중심으로 국가개혁 작업에 착수하였다.

하시모토 내각의 국가개혁 작업은 뒤를 이은 오부치 내각에서도 계속되었는데, 오부치 게이쥔 총리는 낮은 국민 지지도, 참의원의 여소야대 구도에 따른 집권기반의 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인하여 국정운영의 주도력을 장악하지 못한 채, 야당의 대역공세에 밀리기만 하였고, 게다가 '단명 약체 정권', '11월 위기설'의 유포와 더불어 가중되는 정치적 어려움을 겪어야 하였다.

따라서, 집권 자민당은 국정운영의 주도력을 회복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성향이 유사한 '공명당'<sup>6)</sup> 및 자유당과의 정책연대 즉 '자민·자유·공명당 3당 연대'를 모색하게 되고, 그 결과 공명당의 각의 협력<sup>7)</sup>을 바탕으로 한 자민·자유당 연립내각의 발족과 더불어 보다 안정된 집권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오부치 총리는 자민·자유당 연립정부와 공명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하여 주요 현안들을 원만하게 처리하면서 국정 주도권을 장악해 갔다.

- 5) 1996년 11월 하시모토 내각출범시 국민들의 지지도는 매우 높은 56.6%였다.
- 6) 공명당은 1993년 8월에 호소가와 비자민 연립정권에 참여한 후 신생·민사당 등과 함께 1994년 12월에 통합 야당인 신진당에 합당함으로써 해체되었다. 그러나 구(舊)공명당계는 당 해체 이후에도 지방조직을 '공명'으로 존속시키는 등 명백을 유지하여 왔는데, 신진당이 계파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6개의 정파로 분열하게 되자 중의원은 신당평화로, 참의원은 여명클럽(공명으로 통합됨)으로 각각 독립되어 분당하였다. 그런데 창가학회와 지방조직을 중심으로 세력 단일화 요구가 분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8년 6월 29일 '신당 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신당 준비위원회'는 동년 10월 12일 '신당평화'가 '공명'에 합류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공명당을 재결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신당평화'와 '공명'이 동년 11월 7일 '공명당' 합당대회를 개최하고 집행부 및 기본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공명당은 당 해체 3년 10개월만에 국회의원 65명(중의원 42, 참의원 23) 규모의 원내 제3세력으로 부활하게 된 것이다.
- 7) 공명당은 자민당의 '자·자·공 연대' 제안에 대하여 3당 연대에는 참여하지 않고 일단 자민당과 사안별로 협력하는 '부분연합'노선의 추구를 표명하였다.

예컨대, 국가체제 정비작업을 추진시킬 수 있는 집권기반을 다소 강화한 오부치 총리는 1999년 5월 24일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 관련 3개의 법안 즉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 역무 상호제공협정(ACSA) 개정안'을 성립시켰고, 동년 7월 8일에는 행정개혁 관련 2개의 법안 즉 '정부조직 개편법' 및 '지방분권 정비법'을 성립시켰으며, 동년 7월 9일에는 히노마루·기미가요를 국기·국가로 공식화하는 '국기·국가법'을 성립시켰다. 나아가, 오부치 연립내각은 동년 7월 29일에 '헌법조사회'<sup>8)</sup>를 설치하자는 '개헌추진연맹'<sup>9)</sup>의 '국회법개정안'이 가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자민·자유당 연정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여 116, 야 136)의 참의원 구도가 타파되지 않았으므로, 오부치 총리는 정권기반의 구조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수대연합을 추진하게 되었다. 즉, 공명당의 여권 편입을 재차 강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마침내 1999년 10월 5일 자민·자유·공명 3당 연정<sup>10)</sup>이 출범시켰다. 이로써 오부치 연립정권은 참의원 여소야대의 구도를 극복하게 되었는데, 자민·자유·공명 3당의 연립정권은 전후 일본정치사에서 최초로 중의원 70%(348/500석), 참의원 50%(141/252석)이상을 장악한 거대정권이기도 하다.

## (2) 고이즈미 연립내각의 등장과 정치공간 및 안보정책의 보수화 촉진

2000년 4월 2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서거와 더불어 모리 요시로가 뒤를 이어 후임 총리가 되었으나, 모리총리는 '천황중심의 신국', '피랍 일본인의 제3국 발견' 등 잦은 실언에 따른 '총리 자질론' 문제에 대한 국민 비판, 장기적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2001년 4월 6일 사임하게 되고, 대신 개혁을 기치로 내건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선거돌풍을 일으키며 총리로 등장하였다.

8) 중·참의원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헌법조사회'는 의안 제출권이 없는 5년 기간의 한시적 기구이다(중의원 의원 50명, 참의원 의원 45명).

9) 1997년 5월 공산당, 사민당을 제외한 초당파 의원(중·참의원 366명)으로 결성된 '개헌추진의원연맹'은 개헌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높은 국민적 인기를 바탕으로 지지기반의 확대와 '임기 5개월의 잠정정권'의 한계의 타파를 도모하기 위해 '21세기 정치대국 일본'을 지향한 구조개혁 및 신보수 정치노선을 강하게 주창하면서 '강력한 추진력의 리더십'의 발휘를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적 모습은 계속해서 높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01년 6월 동경도 의원선거와 7월의 참의원 의원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7·29 참의원 선거의 자민당 압승<sup>10)</sup>은 고이즈미 총리에게 안정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동년 8월 10일 자민당 의원총회에서 선거없이 임기 2년의 총리에 재당선<sup>11)</sup>된 고이즈미 총리는 '21세기 정치대국 일본'을 지향한 국가체제의 정비나 사회 전분야의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개혁정치 전개속에서 일본의 정치공간은 신보수화 성향을 한층 강하게 나타내었다<sup>12)</sup>.

특히, 일본정치의 보수화 경향 촉진은 안보정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즉, 고이즈미 연립정부는 정치공간의 신보수화 성향, 보수대연합에 의해 강화된 국정운영 기반, 7월 선거 압승에 따른 권력기반의 강화 등의 전략적 활용을 꾀하면서 법적·제도적 정비를 추진하였다. '제III장'에서 상술되어 있듯이, 고이즈미 연립정부는 정보능력의 제고를 위한 정보기관의 정비, '테러대책 특별법'<sup>13)</sup> 및 '대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PKO 협력법'의 개정 법안의 성립 등을 이루었고, 나아가 '유사법제'의 정비를 위하여 관련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10) 7·29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64석 획득으로 1992년이래 처음으로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게 되었고, 아울러 연립여당으로서 78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11)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총재 재선으로 임기가 2003년 9월까지 연장되게 되었다. 『朝日新聞』 2001. 8. 11.

12) 일본 정치공간의 신보수화 성향의 강화속에 고이즈미 총리는 지지기반인 보수 세력을 배려하여 2001년 8월 13일 공인·개인 자격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를 단행하였다.

13) 「테러대책 특별초치법안」은 2001년 10월 18일 중의원에서 가결된 뒤, 동년 10월 29일 참의원에서 최종 통과됨으로써 성립되었다. 『朝日新聞』, 2001. 10. 18 및 19, 동년 10. 29 과 10. 30.

## 2. 대외적 요인: 미·일동맹의 강화

냉전시대의 미·일 동맹은 극동지역에서 소련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미·일의 전략적 역할 분담은 미국의 주도아래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따라서, 1989년 동유럽에서의 공산주의의 몰락이라는 지각변동에 이어 1991년말 소련의 붕괴로 탈냉전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일본 국내에서는 '냉전의 산물'인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무용론'과 '오키나와 기지 철수요구'를 제기하는 견해가 나타나게 되었고,<sup>14)</sup> 아울러 무라야마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인 '방위문제 간담회'가 작성한 정책 보고서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존재방식-21세기를 향한 전망-」(1994. 8)에서는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이보다 UN을 더욱 중시하는 견해가 나타났다.<sup>15)</sup>

이처럼,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미·일 관계는 경제마찰 뿐 아니라 안보분야에서도 우려되는 견해나 의견들에 직면하게 되고, 게다가 1995년 9월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미군병사의 일본 소녀 성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반(反)주일미군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일 양국에서는 미·일 동맹의 약화를 우려하여 미·일 안전보장체제를 확고하게 재정립 또는 재확인시키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sup>16)</sup> 미국 국방부는 1995년 2월에 조세프 S. 나이(Joseph S. Nye, Jr.)가 주도하여 작성한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 관한 미국의 안전보장전략」(「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1995)<sup>17)</sup>의 발표를 통하여 미·일 파트너십(partnership) 및

14) 浅井基文, 『日本外交 反省と轉換』(東京: 岩波書店, 1989).

15) 防衛問題懇談會, 『日本の安全保障と防衛力の存り方 -21世紀へ向けての展望-』(1994. 8). 이 보고서에서는 탈냉전시대에는 UN의 역할이 증대된다는 UN중시의 견해와 더불어 다자간 동맹, 다자간 안보협력 등 '능동적인 국제안전보장'을 강조하는 정책을 건의하였다. 즉,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이보다 UN을 더욱 중시하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16) 船橋洋一, 『同盟漂流』(東京: 岩波書店, 2000).

17)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일본 정부는 동년 11월에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1996년 이후 방위계획의 대강」(이하, 「신방위계획의 대강」이라 칭함)<sup>18)</sup>에서 일본 및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필요 불가결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신뢰성 및 기능적 유효성의 향상 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미·일 양국의 정책표명은 양국 수뇌를 통하여 재차 나타났다. 즉, 1996년 4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일본의 하시모토 총리는 동경 정상회담에서 탈냉전시대 미·일 안전보장체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이라고 규정하면서,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을 천명하는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동맹 (Japan-U.S. Joint Declaration on Security-Alliance for the 21st Century)」<sup>19)</sup>(이하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이라 약칭함)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미·일 동맹은 ‘재확인’되고 ‘재정의’ 되었다. 즉,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의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를 계기로 미·일 동맹이 재확인 되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일본 언론들이나 안보문제 전문가들은 이 공동선언의 발표를 통하여 미·일 동맹이 재정의되었다고 특징지었다.<sup>20)</su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정부는 ‘미·일 안보조약’ 그 자체가 수정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더불어 ‘미·일 안보조약’의 계속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재확인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에 대해 언론이나 안보전문가들은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범위가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된 것에 주목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협력이 ‘미·일 안보조약’의 ‘제5조’(일본 공격시의 공동대처) 및 ‘6조’(극동지역 급변사태시의 기지제공)에서 규정한 협력범위를 훨씬 넘어섰다고 지적하면서 재정의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

*East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February, 1995).

18) 『平成8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1995. 11).

19) “Japan-U.S. Joint Declaration on Security -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의 전문(全文)은 Mike M. Mochizuki, ed. *Toward A True Allianc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7)에 게재된 것을 참조.

20) 五十風武士, 『日米關係と東アジア』(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9); 船橋洋一, “日米安保 再定義の全解剖,” 『世界』(1996. 5); 古川純, “アジアにおける平和の課題と安保條約再定義の意味,” 『法學時報』(1996. 4).

요컨대, 탈냉전시대를 맞이하여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과 더불어 미·일 동맹이 재정의되었는데, '21세기의 지도력 분담(Power-sharing)'을 지향한 미·일 동맹의 강화론은 부시정권의 출범직후인 2001년 3월 20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부시-모리 미·일 정상회담에서 재차 강조되었고, 동년 6월 30일 부시-고이즈미의 캠프데이비드 미·일 정상회담 및 2002년 2월의 부시-고이즈미 동경 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되어 나타났다.<sup>21)</sup> 즉, 부시 행정부는 국가전략연구소(INSS)의 대일 정책 보고서 「미국과 일본: 성숙된 동반자를 지향한 진보」(「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2000)<sup>22)</sup> 및 랜드연구소(RAND)의 정책 보고서 「미국과 아시아」(「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U.S. strateg and Force Posture」, 2001)<sup>23)</sup>의 정책제언처럼, 미·일 동맹 강화 및 일본의 역할증대 전략을 두드러지게 추구하고 있고, 일본의 고이즈미 연립정부 역시 신보수 성향을 배경으로 미·일 동맹 강화 및 대미 편중 외교전략을 취하고 있다.<sup>24)</sup>

21) 예컨대, 부시-모리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안보대화'의 확대 등 동맹 강화가 강조되었고, 부시-고이즈미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미·일 동맹의 중요성의 확인과 더불어 '전략대화'의 개시를 합의한 뒤, 『안전·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22)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y Studie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2000. 10). 동 보고서는 미국 국방대학(NDU)이 포스트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2001.1)에 대비하여 구성된 초당적 연구그룹에 의해 작성되었다. 초당적 연구그룹에는 공화·민주당 행정부에서 국방차관보를 역임한 Richard L. Amitage(1983~86), Joseph S. Nye(1994~95)를 비롯하여 CRF의 Michael J. Green 연구원 등 총 16명의 아시아 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따라서 일명 『아미티지 보고서』(Amitage Report)라고도 불리고 있다.

23) RAND,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U.S. strategy and Force Posture*(2001).

24)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의 안보문제 자문기관인 오카자키 연구소는 정책제언 보고서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제언』(2001)을 통하여 아미티지(Richard L. Amitage) 미국 국무 부장관의 주장처럼 미·일간 안보협력을 미·일 동맹 수준의 균형된 관계로 발전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이를 위해 양국간 긴밀한 전략대화,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국가 긴급사태시 총리 권한의 대폭 확대 등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미·일동맹의 강화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 및 자위대 해외활동의 확대에 나타나고 있다.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에 의한 미·일 동맹의 재정의와 함께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이 작성됨에 따라 미·일 양국의 협력범위는 기존의 '필리핀 이북의 극동'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상황에 따라 탄력성을 가지고 증대되고 있으며<sup>25)</sup>, 9·11 미국 테러사건 이후,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는 미국의 테러전 지원과 더불어 중동, 인도양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 Ⅲ. 일본 안보정책의 보수화와 주요 내용

일본은 미·일동맹의 실효성 강화와 더불어 확대된 군사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보수화 성향으로 경도된 정치공간속에서 강화된 권력기반을 바탕으로 군사력의 질적 증강, 법적·제도적 정비 등을 추구하고 있다.

#### 1. 군사력의 질적 증강

일본은 '일본열도의 비전장화'라는 전략적 목적에 따라 해상방공체제, 미사일 방공체제, 테러 등의 특수전 및 IT혁명 대비체제 등을 추구하고 있고, 아울러 확대된 군사활동을 위한 원거리 작전능력의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즉, 1980년대 일본은 (1) SEA LANE 방위와 3해협 봉쇄를 위한 미·일 전략적 역할 분담, (2) 섬나라라고 하는 지정학적 요소 등을

25) 1978년에 제정된 구(舊) 「방위협력지침」과 비교해 볼 때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① 미·일 방위협력의 중점이 종래의 '일본유사' 및 '극동유사'에서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주변유사'로 이행한 것과 ② '주변지역 유사시의 범위'를 지리적 개념이 아닌 '사태의 성질에 파악하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미·일 양국의 방위 협력을 종래의 '옛 소련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 '중국 위협'이나 '대만 유사' 그리고 '한반도 유사'에 대응하는데 초점을 두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에 따라 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려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제공권·제해권의 확보를 위하여 해상방공체제의 확립을 지향하였는데, 그와 같은 해·공군력의 증강에 역점을 두는 일본의 전략적인 군사력의 정비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특히 21세기에 들어오면서는 미사일 방공체제의 확립, 테러 등의 특수전 및 IT혁명 대처능력 강화, 확대된 군사활동을 위한 원거리 작전능력의 보강 등에 중점을 둔 군사력의 질적 증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력 정비계획의 분석을 통하여 안보전략과 그에 따른 군사력의 질적 증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1990년대 전반(前半)의 군사력 정비계획인 '199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1991~95)을 살펴보면, '199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은 국제환경의 일반적인 변화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고, 1980년대의 군사력 정비계획인 '1981 중기업무무전적'이나 '199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서 추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해상방공체제를 지향하여 해·공의 군사력 증강에 역점을 둔다는 기본방침을 견지하면서 정보·지휘·통신능력 등 후방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는 것이었다. 22조 1,770억엔의 경비가 소요된 '199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나타난 군사력 정비의 방향성은 21세기를 향하여 1990년대에 전개된 일본 군사전략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인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무기의 하이테크와 더불어 첨단기술에 의한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추구한다는 점이었다.<sup>26)</sup> 예컨대, 다연장 로케트시스템(MLRS) 및 C3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and Intelligence)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 최신 이지스(AEGIS)구축함의 건조, 공중경계 관제기(AWACS)의 구입, F2의 미·일 공동개발 등은 일본이 재정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꾀하였음을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추구하는 일본 안보정책의 기조는 1995년 11월 28일의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신방위계획의 대강」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1976년 「방위계획의 대강」이 발표된 이후 19년만에 개정된 「신방위계획의 대강」은 '199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의 검토,

26) 배정호, “신국제질서기 일본의 정치대국화와 국가전략,” 이기택 외, 『전환기의 국제정치이론과 한반도』 (서울: 일신사, 1996), pp. 299~320.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인 '방위문제 간담회'의 정책보고서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존재방식-21세기를 향한 전망-」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탈 냉전시대의 새로운 국제환경을 맞이하여 일본이 추구해야 할 안보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본 전략구도는 육·해·공의 자위대 병력을 20%감축<sup>27)</sup>하는 대신, 다양한 사태에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①합리화, ②효율화, ③콤팩트화, ④기능의 충실과 질적 향상, ⑤탄력성 확보 등을 추구하여 군사력을 질적으로 증강시키고 아울러 정보·지휘·통신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신방위계획의 대강」에서 제시한 군사체제의 정비를 지향하여 일본은 24조 2,300억엔<sup>28)</sup>의 경비가 소요되는 '1996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1996~2000년)을 추진하여 거의 달성하였고,<sup>29)</sup> 군사력의 상당한 질적 증강을 이루게 되었다. 즉, 항모급 상륙함 '오스미'(8,000톤급), 조기경보기(E2C) 13대, 최고의 전함 AEGIS<sup>30)</sup>를 4척을 보유하기에 이르렀고, 조기경계 관제기인 AWACS 4대를 운용하게 되었으며,<sup>31)</sup> 아울러 최신티 지원전투기 F2의 미·일 공동개발의 완료 및 실전배치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외에 일본은 1998년 8월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사건의 영향을 받아 첩보위성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로 하였고,<sup>32)</sup> '전역 미사일 방어체

27) 육상자위대의 경우는 사단과 여단의 개편과 더불어 18만명에서 16만명으로 삭감된다. 즉 육상자위대는 상설자위관 14만 5천명, 즉응 예비자위관 1만 5천명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1997年度 防衛白書』.

28) 1996 「中期防衛力整備計劃」의 예산은 1995년 12월 책정당시에는 25조 1,500억이었으나, 1997년 12월 10일에 열린 각의에서 9,200억엔 삭감되었다. 「內閣官房長官談話」(1997. 12. 19)

29) 「2000年度 防衛白書」.

30) AEGIS함은 미국의 RCA社가 1969년에 개발한 미국의 주력함으로서 360도 3차원 탐지·요격능력을 갖추고 있다. 1척당 가격은 7억 달러이다.

31) 방위백서 등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일본 방위청의 관련 관료들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은 1997년부터 AWACS의 시험비행을 시작하였다.

32)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4~5년내에 군사시설의 정찰이 가능한 첩보위성 및 관련기술을 도입하여 방공체계(防空體制)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이를 일본 정부에 권고하였다. 따라서 1998년 11월 일본정부는 이를 토대로 각료회의에서 2002년까지 첩보위성 4기를 개발할 것을 결정하였다.

체(TMD)'를 미국과 공동연구를 하게 되었다.<sup>33)</sup> 즉, 일본은 1995년 2월 미국측이 제의한 '전역 미사일 방어체제(TMD)'의 공동연구에 참여한다는 기본방침을 결정한데 이어, 1998년 9월에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에서 '해상전역미사일방어체제(NTWD: Navy Theater Wide Defense)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합의하였고,<sup>34)</sup> 1999년 8월에는 미국과 미사일 방어체제의 연구·개발을 위한 5개년 협정에 서명하였다.<sup>35)</sup> 일본이 TMD에 참가하는 전략적 목적은 ①북한 미사일 뿐 아니라 중국 미사일에 대응하는 방공망을 확충하기 위함이고, ②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기·생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③'지도력의 분담'을 지향하여 미·일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2001년부터 일본은 「신방위계획의 대강」에서 제시한 군사체제의 완성을 위하여 '200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01~2005년)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은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 명시된 주변사태 대응체제의 구축을 본격화하고, 자위대의 행동지평을 확장시키는 전략적 목적에 따라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추구하려는 계획이다.<sup>36)</sup>

즉, 방위청은 '200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통하여 원거리 작전능력의

33) TMD 공동연구 기간은 2년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각서의 유효기간이 5년간이므로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朝日新聞』, 1999. 8. 15.

34) NTWD는 이지스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대기권 밖에서 敵의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방어체제이다. TMD 유형에는 NTWD 이외에 '지상배치 전역 고고도 방어체제'(THAAD), 대기권 미사일 요격(저층 방어)체제로 '패트리어트 미사일·해상배치 방어체제(NAD)' 등이 있다.

35) 미·일은 SM-III 미사일, NTWD에 사용되는 요격미사일의 개량과 미사일 탐지기술, Advanced Kienetic Warhead, 미사일 노즈콘(Nose Cone)의 경량화, 2색 적외선 탐지기 등 주로 해상층 방어체제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개발을 진행시키고 있다. 미·일은 1999년에 각각 3,600 백만 달러와 8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손영환·김종국, 『이스라엘/일본의 미사일 방어구상 연구』(서울: 한국 국방연구원, 1998); Robert Wall, "U.S., Japan agree on cooperative missile defense," Aviation Week and Space Technology, 23 August, 1999; 전성훈, 『미·일의 TMD구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서울: 통일연구원, 2000).

36) 西元徹也, "新中期防衛力整備計劃への期待," 『デイフェンス』(2000年 秋季號).

보강, 테러 등 특수전에 대한 대처능력의 강화, IT혁명에 대한 대처 능력의 강화 등에 역점을 두면서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추구하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위청은 '200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기간중에 최신예 지원전투기 F2 47대를 실전 배치하게 되고,<sup>37)</sup> 전투기의 작전반경을 확대하기 위해 공중급유기 4기를 도입하게 되며,<sup>38)</sup> 또 UN 평화유지 활동 및 국제 긴급구조활동 등의 목적을 위해 항속거리 5,000~7,000Km의 장거리 수송기를 자체 개발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방위청은 대양해군을 지향하고 해상 경비체제를 강화한다는 전략적 목적에 따라 호위함·수송함의 대형화 계획과 미사일 고속정 증강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5,000톤급 호위함 4척을 10,000톤급으로 교체함과 더불어 10,000톤급 항공모함 헬기 호위함 2척을 건조하려 하고 있고, 아울러 비상사태시 미군에 대한 해상 보급 능력의 향상을 위해 13,500톤여급 대형 수송함을 자체 건조하려 하고 있으며,<sup>39)</sup> 2003년까지 신형 고속정 6척의 동해기지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sup>40)</sup> 그리고, 일본정부는 '200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의 중점 추진 목표중의 하나로 제시된 게릴라·생화학전 대응태세 구축을 '미국의 테러 사건'을 계기로 한층 강화시켜 추진하고 있다. 즉, 2001년 11월 일본정부는 중앙 정부 14개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되었던 '핵·생화학 테러 대처 협의회'의 장관급 협의회로 격상, '생화학 테러 대응 기본방침' 결정 등과 더불어 게릴라 및 생화학전 대응능력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37) 1995년 12월 14일 일본 각료회의는 F2 130기의 국산 생산계획을 결정하였다. 즉, 일본은 최신예 지원전투기 130기를 실전 배치하게 되는 것이다.

38) 『朝日新聞』, 2000. 12. 16 및 『讀賣新聞』, 2000. 12. 16. 공중급유기 도입문제는 그 동안 일본 정계 내에서 專守防衛 원칙 위배 여부를 놓고 정치쟁점이 되어 왔던 사안인데, 2000년 12월 15일 일본정부는 1대당 238억엔 하는 공중급유기를 『200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기간중에 4대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39) 2000년 1월경 일본은 수송함(LST) 8,900톤급 1척, 2,000톤급 4척, 소형 수송함(LSU) 590톤급 2척, 수송정(LSU) 420톤급 2척을 보유하는 수준에 있다.

40) 신형 고속정은 최고시속 44노트(80km)의 200톤급으로서 대함 유도 미사일, 76밀리·12.7밀리 소형 기관포 및 야간 적외선 투시경을 탑재하게 된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 신형 고속정을 3척 1개 편대로 마이루즈·사세보 기지에 배치시킴으로써 현재의 훗카이도 편대와 함께 3개 편대 운영체제를 갖출 계획인데, 2001년부터 2척씩 건조할 예정이다. 일본 방위청은 이를 위하여 1999년도부터 매년 방위예산에 190억엔을 배정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최근 방위청은 이와 같은 무기체계의 증강에 이어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자위대의 조직, 장비체계 등 근본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려 하고 있다.<sup>41)</sup> 즉,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 러시아와 한반도의 정세 변화, 미국의 미사일 방어계획 추진 등 안보환경의 변화와 IT의 급속한 발전 등을 감안하여 「신방위계획의 대강」을 개정하는 수준까지 군사력을 재검토하려는 것이다.

요컨대, 이와 같은 일본의 군사력의 증강 노력은 ①21세기를 향한 일본의 군사전략이 조기경계 및 전방대처를 위하여 전략지정학적 차원에서 해상방공체계의 강화와 더불어 미사일 방공체계의 구축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②테러 등 특수전 및 IT혁명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③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에 따른 일본의 역할 증대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함이다. 아울러 ④ 독자적 영역의 확대를 추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의 군사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 2. 제도적 및 법적 정비

일본 정부는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발전에 따른 확대된 군사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사력의 질적 증강이라는 ‘하드 파워(hard power)’의 증강뿐 아니라 법적·제도적 정비 등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즉, 일본 정부는 정치공간의 신보수화 성향, 보수대연합에 의해 강화된 국정운영 기반 등의 전략적 활용을 피하면서 법적·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의 군사·정치적 역할의 확대와 관련, 일본 정부의 조직 정비 노력은 먼저 국가정보기관의 역량 강화작업에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1997년 1월 20일 종합정보기관인 ‘통합정보본부’를 창설하였고, 1998년 12월 28일에는 ‘방위 정보회의’를 설치하였으며, 1999년 1월 11일에는 ‘내각 정보회의’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2001년 1월 6일 중앙부처의 개편

41) 『동아일보』, 2001. 9. 12.



이 시행됨을 계기로 정보기관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신방위계획의 대강」의 수립을 계기로 통합막료회의 산하에 설치된 '통합정보본부'(직원수 약 1천 6백명)는 정보수집 및 분석의 일원화를 위하여 방위청의 내국과 통합막료회의, 육·해·공 자위대의 정보부문 등 기존의 정보조직을 하나로 통합시킨 '미국 국방정보국(DIA)'과 유사한 기관이고,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라 발족한 방위청의 '방위 정보회의'는 위기 발생시 '정보본부'에서 수집·분석한 동북아 전략정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총리에게 자위대 출동여부를 신속하게 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각 정보회의'는 북한정세 등 주요 정보를 수집·분석하는데 역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1999년 7월 '정부조직 개편법'의 성립과 더불어 2001년 1월부터 총리의 국정주도권 및 내각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독자적 정보능력의 제고를 위한 군사위성 정보처리 능력의 강화, 내각정보조사실의 지위 격상, 외무성의 국제정보국의 역량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고, 나아가 안보정책 분야의 통합관리를 위해 방위청을 '방위성' 또는 '국방성'으로 승격하는 작업이 추구하고 있다.<sup>42)</sup> 즉, 일본 정부는 1999년 4월 내각 관방 산하에 군사첩보위성의 활용 강화를 위한 '첩보수집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 데 이어 2002년부터 보유하게 될 첩보위성 수집 정보의 분석·관리를 위한 '위성 정보센터'의 신설을 꾀하고 있고, 아울러 총리 직할의 내각정보조사실을 지위격상시켜 국가정보네트워크의 정점기관으로서 중추적 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있으며,<sup>43)</sup> 외무성 국제정보국의 정보수집·분석기능의 강화를 위

42) 일본의 연립정권내 보수세력들은 2000년 8월 8일에 참의원내에 「방위성 설치 추진 의원연맹」을 발족한 데 이어 동년 11월 28일 자민·공명·보수 3당간 「성 승격 간담회」 설치에 합의하였다. 방위성으로 승격될 경우, 외무성(국제 안보 협력·조약), 통산성(방위예산), 내각안보회의(위기관리) 등의 여타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안보정책 분야 업무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43) 국가정보관리체계의 일원화 작업과 관련, 내각조사실은 국가정보네트워크의 정점기관으로서 지위격상이 이루어졌다. 즉, 내각정보조사실의 영어명칭이 Cabinet Information Reserch Office→Cabinet Intelligence & Research Office로 변경됨과 더불어, '내각조사실장'의 명칭도 '내각정보관'으로 변경되었고 직급도 차관보에서 차관급으로 직급 격상되었다. 따라서, 내각정보관은 공안조

해 대폭적으로 인원을 확충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일본정부는 자위대의 대내외적 활동 강화 및 미·일동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고이즈미 연립정부의 등장이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즉, 일본 정부는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의 정비에 이어 '테러 대책 특별법'의 제정, PKO 협력법의 개정 등을 성립시켰고, 유사법제의 정비,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과 관련된 법안의 정비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의 2차 중간 보고안이 발표된 직후, 「1997년도 방위백서」를 통하여 제기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방위백서」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주변국가에 대한 자위대의 작전지침과 관련된 긴급대응책과 일본 주변유사에 대비한 법제의 정비를 주장한 것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이 실제상황에서 시행되려면 '자위대법', '유엔 평화 유지활동(PKO)법', '해상 보안청법', '항만법', '항공법' 등 최소한 20여개의 법령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한다고 한다.<sup>44)</sup> 따라서, 1999년 5월에 보수 연립정부는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과 관련된 3개의 법안을 성립시켰고, 이어 2000년 10월말에는 '선박조사 활동법'을 성립시켰다. 즉 자민-자유 2당 연립정부는 야당 공명당과의 정책연대아래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 사건' 및 '북한 공작선의 영해 침투사건'을 계기로 일본내 대북한 위협인식이 상당히 제고되고 있는 분위기를 활용하여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관련 3개 법안 즉,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역무 상호제공 협정(ACSA) 개정안'을 1999년 5월 24일에 최종적으로 성립시켰고, 자민-공명-보수 3당 연립정부는 2000년 10월 30일에는 '주변사태법'에서 삭제된 '선박조사 활동법'을 성립시켰다.<sup>45)</sup> 이로써, 일본 주변지역의 유사시에 자

---

사청, 외무성의 정보조사국 등 각 정보기관의 수집내용을 종합하여 총리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44) 예컨대 자위대법의 경우는 제82조, 제83조, 제89조, 제93조, 제95조, 제99조, 제100조 6, 제100조 7, 제100조 8, 제100조 9가 개정될 것임.

45) 원래 선박검사조항은 「주변사태법」의 원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유엔안보리 결의 포함' 문제와 관련하여 자민·공명당과 자유당간의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음에 따라 「주변사태법」의 원안에서 삭제되었다. 즉, 유엔안보리 상임이

위대는 주일 미군의 병참지원 등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40개의 항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일본 주변지역의 유사시'에 자위대 활동을 보장하는 법제를 정비한데 이어, 일본정부는 2001년 9월에 발생한 미국 뉴욕의 테러사건을 계기로 동년 10월 '테러대책 특별법'을 제정하였고<sup>46)</sup>, 동년 11월 '대미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동년 12월 'PKO 협력법'을 개정하였다. 즉, 고이즈미 연립정부는 신보수화 성향으로 경도된 정치공간을 이용하여 자위대의 분쟁지역 파견을 가능케 하는 '테러대책 특별법' 및 '대미 지원 계획'을 마련하였고, 자위대의 무기사용 제한 완화 및 UN평화유지군(PKF) 참가 허용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PKO 협력법'의 개정 법안을 최종 가결, 성립시켰다<sup>47)</sup>.

그리고, 현재 고이즈미 연립정부는 외국으로부터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감행될 경우, 자국 영토내에서 자위대의 활동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유사법제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고이즈미 연립정부는 2002년 4월 16일 각료회의에서 '무력공격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등 3개의 유사법제 관련 법안을 결정하였고, 4월 17일 국회에 일괄적으로 제출하였다.

요컨대, 21세기의 정치대국을 지향하는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군사적 역할의 증대를 추구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정비를 추진해 가고 있고, 2001년 9월의 '미국 테러 사건'과 이에 자극을 받은 일본 국민들의 안보 의식 고조는 이와 같은 법적·제도적 정비에 전략적 촉매제로 활용되고

사국의 거부권이 발동되면, 해상자위대는 선박검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원안에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2000년 10월 30일에 성립된 「선박조사 활동법」에서는 '기국(旗國, 선박이 소속된 국가)'의 동의를 얻어 선박조사 활동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6) 「테러대책 특별초치 법안」은 2001년 10월 18일 중의원에서 가결된 뒤, 동년 10월 29일 참의원에서 최종 통과됨으로써 성립되었다. 『朝日新聞』, 2001. 10. 18 및 19, 동년 10. 29 및 10. 30.

47) 1992년 6월에 제정된 「PKO 협력법」은 'PKO 5원칙' 즉 ①정전합의, ②당사국의 일본 참가 동의, ③중립성 유지, ④이상 3원칙 미 충족시 철수, ⑤자위대원의 생명·신체보호의 필요시에만 무기 사용 등에 따라 파병요건 및 활동범위를 제한하였다.

있다<sup>48)</sup>.

#### IV. 결론

탈냉전시대의 도래이후, 1993년 7·18총선을 계기로 전개된 일련의 정치변동속에서 일본 정계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신보수세력은 21세기 정치대국을 지향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론'을 주창하였고, 이를 위해 국가개혁의 추진을 지향한 국정기반의 권력강화 및 보수대연합을 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본정치는 보수적 성향으로 변모하게 되고, 아울러 전환기적 상황에 직면하였던 미·일동맹은 재정의와 함께 한층 강화되었다.

즉, 일본의 안보정책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증대를 지향하여 ①대내적으로는 정치공간의 보수화 성향속에서 ②대외적으로는 미·일동맹의 강화를 명분으로 보수화되고 있고, 이는 군사력의 질적 증강 및 제도적·법적 정비를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안보정책의 보수화에 대해서는 안보정책 차원 이상 즉, ①'21세기의 정치대국 일본'을 지향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의 일환, ②정상적인 국가로서의 국가체제 정비와 군사적 활동 법적·제도적 정비, ③21세기 파워 분담을 지향한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역할 증대 등의 관점에서 주목하고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

48) 미국 테러사건 이후, 일본 국민들은 안보문제에 대한 관심의 제고와 함께 테러대책을 외교·안보 공히 최우선 과제로 지적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에 대해서 그다지 부정적인 거부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일본정부가 유사법제의 정비,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인정 등 국제사회에서의 자위대의 역할 증대를 지향하는 안보정책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제공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